

2019년 10

건축도시 정책동향

Vol. 052

AURI POLICY UPDATES

건축·도시 분야 Updates

- 법·제도 동향
- 계획추진 동향
- 사업추진 동향
- 시스템구축 동향

(aur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도시정책동향

2019년 10 (Vol.52)

발행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발행인	박소현
ISSN	2635-5140
기획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집필진	조상규, 김영현, 강리아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01호
연락처	044-417-9619
이메일	yhkim@auri.re.kr

[안내]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아우름 사이트(www.aurum.re.kr)'에 접속하면
건축·도시 관련 분야 최신 정책정보를 더욱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2 건축·도시 분야 법·제도 동향

국토부, 드론 산업 활성화 위한 규제 샌드박스 마련

국토부, 2020년 4월말부터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의무 공개

인천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일부 개정

광주시, 산업통상자원부에 광주시 내 5개 지구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

4 건축·도시 분야 계획추진 동향

부산시, 부산-정비사업 조합, 「민관 공동건축설계」 합의안 마련

인천시,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 관련 행사 개최

인천시, 원도심 균형발전계획 및 2030 도시재생전략계획 공청회 개최

울산시, 태화강 동천유역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고시, 관리대책 수립 계획

경기도, 「2035년 가평 군기본계획」 수립안 승인

경남도,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 수립 추진

제주도, 국토부,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도 의견 제출 요청

제주도,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추진

8 건축·도시 분야 사업추진 동향

국토부, 미주개발은행(IDB)와 스마트시티·인프라 투자협력 MOU체결

충북도,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본격추진

해수부, 「한국의 갯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도전, 8일 현지실사

국토부, 수소 시범도시 2022년까지 3곳 조성 계획 발표

문체부, 광역시 1곳, 지자체4곳 관광거점도시 육성 정책 발표

문체부, 생활관광 활성화지역 사업 지역 6곳 선정

산업부, 2022년까지 수소충전소 310곳 구축 계획 발표
부산시, 공공건축 설계공모 시범사업 추진
인천시, 「원도심 디자인 명소화 사업 실행계획 보고회」 개최
경기도, 경기교통본부 공식 출범, 도내 19개 시군과 노선입찰제 시행 MOU체결
경기도, 「3기 신도시」 사업 본격화
경기도, 고덕국제신도시 1단계 구역 지적공부 확정 및 시행
충북도, 「생활SOC복합화 사업」 신청한 8곳 모두 정부승인, 국비 384억원 확보
전북도,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 국토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충북도, 「4차 산업혁명 대응 충북산업육성 실행계획」 추진
경남도, 어촌뉴딜300사업 해수부에 공모 선정 건의
전북도, 2020 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에 국비 52억 확보
전남도, 생활SOC복합화 사업위해 국비 465억원 확보
전남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국비 12억 확보
전남도, 2020년 해양환경 정화사업 확대 운영
경북도, 경북바이오2차 일반산업단지 착공
경남도, 「생활SOC복합화 사업」 23개소 선정
세종시, 생활SOC 복합화 사업 2곳 선정

건축·도시 분야 시스템구축 동향 20

서울시, 도시농업 정보 제공해주는 「서울농부포털」 오픈
부산시, 지하도 상가 7곳 무료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실시

건축·도시 분야 Updates

2019년 10월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시·도에서 발표한 건축·도시 관련 분야 보도자료를
관련 주제, 진행 현황, 담당 기관별로 구분하고,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정리하여 제공합니다.

국토부, 드론 산업 활성화 위한 규제 샌드박스 마련

첨단항공과, 2019.10.17.

국토
정책

진행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무조정실 등은 17일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논의, 확정했다.

관련 부처와 항공우주연구원, 드론산업진흥협회 등 총 30개 기관이 논의를 거쳐 완성한 로드맵에는 국내 드론 기술·산업 발전 시기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총 35건의 규제가 담겼다. 교통·제도·인프라 관련 규제가 19건, 배송·운송 등 드론 활용 영역 관련 규제가 16건이다.

국토부, 2020년 4월말부터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의무 공개

주택건설공급과, 2019.10.23.

주택
정책

진행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4일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리비 의무관리 대상을 100세대 이상 중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확대했다. 지금까지 대상은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건축물이었다.

다만, 제도도입 초기인 점과 관리인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해 기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47개 세부항목 공개)과 달리 새로 추가된 100세대 이상 중소규모의 경우 일반관리비·청소비·수선유지비·전기료·수도료·장기수선충당금·잡수입 등 21개 대항목만 공개하도록 했다.

인천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일부 개정

건축계획과, 2019.10.21.



인천광역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공동주택 수도요금 세대별 부담액 산정기준 마련과 피난시설 및 화재시 대피요령 등에 대해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의 주거유형 중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비중은 80%(2018년말 기준 906,436세대)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준칙 개정은 법령개정 및 각종 민원의 증가와 다양화에 대응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것으로 기존 관리규약에서 11개 조문을 정리하는 등 개선·보완하기로 했다.

광주시, 산업통상자원부에 광주시 내 5개 지구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

투자통상과, 2019.10.01.



광주광역시는 지난 9월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빛그린산단, 에너지밸리 일반산단, 에너지밸리 도시첨단국가산단, 평동3차산단, 첨단3지구산단 등 5개 지구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조성’ 지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 경제자유구역 :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규제완화 등 유리한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조성해 투자 유치에 촉진하기 위해 조성된 특별구역을 지칭

개발계획에는 ‘상생과 인공지능(AI) 기반 융복합 신산업 허브’라는 비전 아래 미래형 자동차 산업지구, 스마트에너지 산업지구 I, 스마트 에너지 산업지구 II, 지능형 공기 산업지구, 인공지능(AI) 융복합지구 등 5개 지구에 선도 기술을 보유한 핵심 앵커기업 및 연구기관 등을 유치해 혁신 생태계를 구성하고 혁신 성장을 가속화한다는 안이 담겼다.

부산시, 부산-정비사업 조합, 「민관 공동건축설계」 합의안 마련

도시정비과, 2019.10.17.

건축
정책

도시
정책

진행

부산시장이 17일 오전 기자회견장에서 지난 1년여간 추진에 난항을 겪었던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합의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건물 층수와 높이를 하향 조정하여 건축물의 스카이라인을 살리기로 하였다. 둘째, 건물 동수와 배치계획을 조정하여 통경축을 확보하고 공원 지역의 일조를 대폭 개선하였다. 셋째, 자연지형을 최대한 살리도록 촉진3·4구역에 특별건축구역이라는 대안적인 설계를 추진하였다. 넷째, 새롭게 만들어 지는 지역은 열린 공간으로서 24시간 365일 개방되는 마을 형태의 주거지가 될 예정이다.

인천시,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 관련 행사 개최

도시균형계획과, 2019.10.23.

도시
정책

진행

인천시는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시민계획단」 대표와 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40년 인천 미래비전 등이 담긴 ‘시민제안서’를 시민이 직접 인천시장에게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 도시기본계획 : 시정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장기적인 도시공간 구조(틀)와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2040년 미래비전은 “시민중심의 국제·문화·해양도시”로 선정되었으며, 그 의미로는 세계적인 공항과 항만을 보유한 국제도시로서의 품격과 문화적 다양성이 공존하는 해양친수도시를 만들어 가자는 시민들의 의지를 담고 있다.

인천시, 원도심 균형발전계획 및 2030 도시재생전략계획 공청회 개최

재생정책과, 2019.10.16.



인천광역시가 10월 16일 제물포스마트타운에서 ‘인천 원도심 균형발전 계획(안)’ 설명회 및 ‘2030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안)’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 국토연구원 컨소시엄(동명기술공단, 도담이앤씨)과 함께 ‘인천 원도심 균형발전계획’을 수립 중인 인천시는 ‘더불어 잘 사는 균형발전’이라는 비전하에 인천시 전지역을 5개 생활권으로 구분(중부·남부·동북·서북·강화웅진)하여 쇠퇴도와 잠재력을 분석하고, ‘거점중심 특화발전’과 ‘노후 환경개선’의 두가지 목표와 ‘①역사문화를 활용한 원도심 활성화’, ‘②경제기반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③저·미이용 공공공간을 활용한 생활공간 활력 제고’, ‘④노후주거지 재생을 통한 행복체감도 향상’, ‘⑤기초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한 생활편리성 증대’의 5개 전략을 바탕으로 다양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울산시, 태화강 동천유역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고시, 관리대책 수립 계획

환경생태과, 2019.10.23.



울산시는 환경부가 태화강·동천유역 126.939km²를 비점오염원* 관리 지역으로 지정·고시 했다고 밝혔다.



* 비점오염원 :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하며 빗물 등에 의해 씻겨지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된다.

태화강유역은 37.462km²로 남구 4개동(달동, 무거동, 삼산동, 신정동)과 중구 13개동(교동, 다운동, 반구동, 복산동, 북정동, 성남동, 성안동, 옥교동, 우정동, 유곡동, 태화동, 학산동, 학성동)이 지정됐다.

동천유역은 89.477km²로 중구 9개동(남외동, 동동, 반구동, 복산동, 서동, 성안동, 약사동, 장현동, 학성동)과 북구 13개동(가대동, 달천동, 대안동, 매곡동, 명촌동, 상안동, 송정동, 시례동, 신천동, 연암동, 중산동, 진장동, 창평동)이 지정됐다.

경기도, 「2035년 가평 군기본계획」 수립안 승인

도시주택과, 2019.10.16.



경기도는 16일 가평군 미래도시 발전의 청사진인 ‘2035년 가평 군기본 계획 수립(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도시공간구조는 기존 1도심(가평), 3부도심(청평, 설악, 현리)을 그대로 유지하고, 4개의 지역생활권(가평, 청평, 설악, 현리)을 3개의 지역 생활권(가평, 청평·설악, 현리)으로 개편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여건을 마련했다.

아울러,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 및 미관 유지를 위해 경관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은 물론, 기타 사회, 문화, 경제, 방재안전계획 등 각종 개발지표를 설정했다.

경남도,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 수립 추진

하천안전과, 2019.10.16.



경상남도가 2020년부터 경남도로 이양되는 지방하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홍수에 안전하고 도 실정에 맞는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첫째, 하천별 특성을 전수조사를 통해 지방하천 현황, 하천기본계획 연혁과 수립비용을 산정한다.

둘째, 지방하천사업을 위한 제방보강, 내·외수처리, 하도정비, 이수 및 하천환경을 계획하고 관련계획을 면밀히 분석 검토해 투자 우선 순위를 선정하며 사업추진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상남도 지방하천 사업 집행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셋째, 도심지 하천을 중심으로 기존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도입을 통한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를 위해 복원목표를 정하고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하천을 선정한다.

넷째, 하천가치 향상, 지역과 도민이 공감하는 하천사업을 위해 주변 지역 사업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하천사업 제안공모를 추진한다.

제주도, 국토부,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도 의견 제출 요청

도공항확충지원과, 2019.10.18.

건축
정책

진행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견 제출을 공식 요청했다.

*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8조(공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등) ③항 : 법 제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게 하고 그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에 제주도는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오늘(18일)부터 11월 4일까지 주민열람을 위한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한다.

주민의견은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에 포함된 공항의 현황분석, 공항의 수요전망, 공항개발 예정지역, 공항 규모 및 배치, 건설 및 운영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대한 의견뿐만 아니라 도민이익 극대화 방안, 지역상생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한다.

제주도,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추진

건축지적과, 2019.10.21.

건축
정책

문화
관광

진행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건축자산의 체계적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한 건축자산 진흥 정책 목표와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주의 삶과 풍경이 어우러진 일상공간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3개 목표, 8개 실천과제, 15개 세부 실행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며 건축자산의 조사 발굴, 보전 활용, 진흥을 위한 가치공감 및 확산을 위한 세부 실행사업들을 추진하여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제주 지역의 정체성과 특성을 잘 나타내는 건축자산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실행방안 제시와 함께, 제주의 고유한 건축자산인 ‘제주형 한옥’에 대한 조사와 보전 활용에 대한 계획 등 제주 전통 건축자산에 대한 사업들을 계획에 포함하여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건축·도시분야 사업추진 동향



국토부, 미주개발은행(IDB)와 스마트시티·인프라 투자협력 MOU체결

해외건설정책과, 도시정책과, 2019.10.07.



국토교통부는 10월 7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미주개발은행*과 스마트시티·인프라 공동투자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 IDB(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 중남미 국가에 대한 경제사회발전자금 지원을 위해 '59년에 설립된 미주지역 최대 금융기구(회원국 48개국, 본부 미국 워싱턴D.C., 자본금 약 1,768억불(약 213조원), 직원수 2천여명)

주요 내용은 중남미 국가의 스마트시티 및 인프라 분야 발전을 위한 공동투자, 정보·기술 협력, 인적교류 등이다.

국토교통부와 IDB는 중남미 지역의 스마트시티 및 인프라 분야 공동 사업을 발굴·투자하기 위해 이번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우선 중남미 주요도시 1~2곳을 선정하고 우리 전문가를 활용해 해당도시의 스마트시티 기본구상을 수립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향후 사업화하여 실행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충북도,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본격추진

교통정책과, 2019.10.16.



충청북도의 최대 현안인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의 공식적인 첫절차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30일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의 기본계획 용역 입찰공고(긴급)를 통해 용역수행기관을 선정하는 절차에 나섰다.

기본계획 용역은 업체가 선정되는 11월부터 1년간 진행되며, 노선의 선형·정거장 및 열차 운행계획·지반조사 등이 종합검토될 예정이다.

해수부, 「한국의 갯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도전, 8일 현지실사

해양생태과, 2019.10.08.

국토
정책

환경

완료

우리나라의 15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두번째 자연유산 등재에 도전하는 ‘한국의 갯벌’ 전문가 현지실사가 끝났다.

‘한국의 갯벌’은 서천갯벌(충남 서천), 고창갯벌(전북 고창), 신안갯벌(전남 신안), 보성-순천갯벌(전남 보성, 순천) 등 총 4개로 구성된 연속유산이다. 전체 유산구역은 12만 9346ha이며 모두 해수부가 연안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현지실사 담당자들은 갯벌 중 서천 유부도, 고창 만돌리, 신안 선도, 보성 장도, 순천만 등 4개 지역을 방문, 해당 갯벌의 보전·관리 현황과 세계자연유산 등재요건의 충족 여부를 점검했다.

국토부, 수소 시범도시 2022년까지 3곳 조성 계획 발표

도시정책과, 2019.10.10.

도시
정책

진행

정부는 올해 안으로 전국 지자체 중 3곳을 ‘수소 시범도시*’로 선정하고 계획 수립 및 인프라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 수소도시 : 한 도시 안에서 수소 생산·저장·이송·활용이 모두 가능한 ‘수소생태계’를 갖춘 곳을 말한다.
아울러 수소를 주된 에너지원으로 활용해 건강하고 깨끗한 생활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다.

국토교통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소 시범도시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도시 내 3~10km²의 면적을 주거·교통 분야 수소 활용 기술을 테스트할 ‘수소 시범도시’로 지정해 안정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조성계획을 토대로 타당성, 실현가능성, 향후 수소정책 추진 의지 등을 종합 평가해 12월 중 3곳을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문체부, 광역시 1곳, 지자체4곳 관광거점도시 육성 정책 발표

관광개발과, 2019.10.15.



정부가 세계적 수준의 관광자원과 브랜드를 갖추고 방한관광의 새로운 목적지가 될 수 있는 거점도시로 광역시 1곳, 기초지방자치단체 4곳을 육성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부터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을 공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체부는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고 싶은 세계적 수준의 대표 관광도시를 육성해 방한 관광객의 방문을 확대하는 한편, 관광객들의 방문지가 지방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관광거점도시 육성 : 지난 4월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관광혁신전략'에서 지역 관광을 혁신하기 위해 계획된 정책

문체부, 생활관광 활성화지역 사업 지역 6곳 선정

국내관광진흥과, 2019.10.16.



부산 동구, 강원 강릉시, 충남 서천군, 경남 하동군, 대구 북구, 전남 강진군 등 6곳이 '2019 생활관광 활성화 공모 사업' 지역으로 선정됐다.

문체부는 올해 처음으로 '생활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각 지역만이 가진 고유한 문화 및 지역주민들의 일상과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결합해 '현지인다움'과 '지역다움'을 체험할 수 있는 생활관광콘텐츠를 중점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문체부는 1차, 2차, 3차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현지나들이형*' 4곳, '현지살아보기형**' 2곳을 지원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

* 현지나들이형 : 지역주민이 주로 찾는 골목길, 맛집, 서점 등의 생활 장소와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관광자원화하여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되는 장소 방문 및 체험 중심 여행

** 현지살아보기형 : 지역에 장기간 머물며 그 지역만의 문화와 역사, 지역민들의 일상을 공유하는 여행

산업부, 2022년까지 수소충전소 310곳 구축 계획 발표

신에너지산업과, 2019.10.22.

국토
정책

환경

진행

오는 2022년까지 전국 주요 도시와 고속도로에 수소충전소 310곳이 설치돼 수소차 운전자들이 최대 30분 이내에 충전소에 도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은 22일 ‘수소 인프라 및 충전소 구축 방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3년안에 전국 주요 도시에 일반 충전소 190기, 버스 전용충전소 60기 등 250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속도로 등 교통거점에는 수소 충전소를 2022년까지 누적 60기를 구축해 수소차의 장거리 운행을 지원하고,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부산시, 공공건축 설계공모 시범사업 추진

총괄건축기획과, 2019.10.03.

건축
정책

진행

부산시는 ‘우암부두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5건의 공공건축 사업에 대해 연말까지 공공건축 설계공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가 의무화되고, 건축설계 공모와 사업계획 사전 검토 대상이 확대되는 등 변화하는 공공건축 정책과 제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부산시의 공공건축물에 대한 공공성 확보와 디자인 향상을 위해 추진된다.

부산시는 설계공모 전 과정에 걸쳐 건축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설계공모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이끌어 내기 위해 설계공모 참여자격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공모안 제출 도서도 간소화하는 등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 「원도심 디자인 명소화 사업 실행계획 보고회」 개최

도시경관과, 2019.10.01.



인천광역시는 10월 1일 ‘원도심 디자인 명소화 사업 실행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중앙부처의 공공디자인 진흥종합계획 시행에 맞춰 디자인을 통해 도시환경개선은 물론 보행편의개선, 안전 체감율향상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감성을 치유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야간경관 명소 8개 사업(인천애뜰, 인천대공원, 수봉공원, 중앙공원, 동인천역, 아라뱃길, 예술회관일원, 내항1.8부두 등)과 디자인 분야 8개 사업(버스디자인, 학교환경개선, 섬마을디자인, 인천색 홍보교육, 군구별 특화디자인, 원도심 디자인 마을조성, 범죄 예방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및 인천전용색채 개발 등)이다.

경기도, 경기교통본부 공식 출범, 도내 19개 시군과 노선입찰제 시행 MOU체결

광역교통정책과, 2019.10.10.



도는 내년부터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만큼, 경기교통본부를 우선 출범시켜 향후 공사에서 수행할 사업들의 준비를 완료, 초기 공사운영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개소식에 이어 노선입찰제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19개 시군, 경기도시공사와 ‘경기도형 준공영제(노선입찰제) 시행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서 경기도는 추진계획 수립, 노선 선정, 운영 기준 마련 등 정책 총괄을, 시군은 노선발굴과 한정면허 발급, 노선 관리를, 경기도시공사는 노선입찰과 운송비용 정산, 서비스 평가 등을 담당하기로 약속했다.

*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 영구면허로 운영하는 민영제와 달리, 버스 노선을 공공이 소유하고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된 운송사업자에게 한정면허를 부여해 버스운행을 위탁하는 제도

경기도, 「3기 신도시」 사업 본격화

공공택지과, 2019.10.13.

국토
정책

진행

정부가 남양주, 하남, 과천일대 100만㎡ 이상 규모의 대규모 택지 4곳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하기로 확정함에 따라 10만5,000호 규모의 ‘3기 신도시’ 조성이 본격화된다. 특히 LH 주도로 이뤄졌던 기존 1·2기 신도시와는 달리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도 ‘공동 사업시행자’로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3기 신도시’는 사상 최초의 ‘지방 참여형 신도시’로 조성될 전망이다.

도는 ‘교통대책 선 마련’, ‘자족기능 강화’ 등을 통해 ‘3기 신도시’를 ‘일자리와 주거가 함께하는 지역 맞춤형 미래형 신도시’로 조성해 나가는 한편 ‘개발이익 환원’, ‘후분양제’ 등 ‘서민 중심의 경기도형 주거정책’ 접목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완료에 따라 남양주, 하남, 과천 일대에 조성되는 ‘3기 신도시’는 오는 2020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 등을 거쳐 오는 2021년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고덕국제신도시 1단계 구역 지적공부 확정 및 시행

공공택지과, 2019.10.16.

국토
정책

완료

경기도는 지난 7월 조성이 완료된 고덕국제신도시 1단계 구역에 대한 지번, 지목, 면적, 좌표 등이 부여됐다고 16일 밝혔다. 1단계 구역은 평택시 고덕면 여염리, 해창리 일원 273만㎡ 규모 부지이다.

평택시장은 지적공부 부여에 앞서 10월 1일부터 11일까지 지적공부를 확정·공고했다. 공고기간 동안 이해당사자들의 이견이 없었고, 시는 계획대로 종전 토지인 고덕면 여염리 134-4번지 등 3,140필지를 폐쇄하고, 여염리 4101번지 등 2,235필지를 새로이 확정했다. 확정된 토지는 종전 토지와 합계 면적은 같지만 부지 조성으로 모양 및 경계가 정형화돼 합계 필지수는 905필지가 축소됐다.

충북도, 「생활SOC복합화 사업」 신청한 8곳 모두 정부승인, 국비 384억원 확보

정책기획관, 2019.10.03.

건축
정책

진행

충청북도가 2020년 정부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신청한 8개 복합사업(23개 시설)이 전부 선정되어, 도내 곳곳에서 복합시설 건립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 생활SOC복합화 : 복수의 생활SOC 시설을 단일 또는 연계 시설물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며, 복합화를 통해 시설 활용도 제고, 다부처 사업 추진 용이, 운영 효율성 및 주민 만족도 향상 등이 가능

특히, 복합시설의 경우 기존 단일시설 지원비율에 국고보조율이 10% 인상되며, 대상시설은 국민체육센터, 가족센터 등 10종 시설이다.

건립예정인 복합시설은 청주 영운동 복합문화 어울림센터, 충주 복합체육센터, 제천 시민문화센터 ‘산책’, 옥천 군서 체육센터, 영동 가족센터, 증평 가족센터, 진천 복합혁신센터, 단양 올누리 행복 가족센터이다.

전북도,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 국토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공항하천과, 2019.10.10.

국토
정책

진행

새만금 신항만과 군산 대야를 잇는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이 국토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첫 관문을 통과했다.

이로써 새만금항 인입철도가 완성되면, 내년 말 개통 예정인 군장산단 인입철도와 익산~대야 복선전철을 통해 새만금 신항에서 호남선, 전라선, 장항선까지 연결이 가능해져 주민들의 철도교통 편익이 크게 증진될 뿐 아니라 새만금 신항만을 중심으로 한 산업물류단지 물류수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충북도, 「4차 산업혁명 대응 충북산업육성 실행계획」 추진

전략산업과, 2019.10.29.



충북도는 정부의 신성장산업 육성에 발맞추어 전 산업이 디지털기술과 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능화 혁명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자 「4차 산업혁명 대응 충북산업육성 실행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으로 기존산업을 지능화하고, 신성장산업 발굴로 충북의 미래 먹거리 창출해 나가고자 한다. 이에 5대 핵심산업 육성 및 혁신생태계 조성을 추진전략으로 2030년까지 105개 추진과제에 5조 9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19.10월 기준).

5대 핵심산업으로 친환경스마트에너지, 지능형 바이오헬스, 스마트 농·축산 등 기존산업의 지능화와 미래수송기계, 시스템반도체 등 신성장산업을 집중 육성하고자 하고, 제조현장 스마트화 가속, R&D·창업 생태계 구축, 4차 산업혁명 융복합 기반조성 및 인력양성 등 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해 5대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경남도, 어촌뉴딜300사업 해수부에 공모 선정 건의

해양수산과, 2019.10.02.



경상남도 경제부지사가 10월 1일, 도내 고용위기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양수산부 차관, 기획조정실장을 방문해 2020년 어촌뉴딜300사업 해양수산부 공모 선정을 직접 건의했다.

더불어 경상남도 어류 양식 주력품종인 조피볼락, 참돔 등의 육종 연구를 위한 국립수산물과학원 육종연구센터 연구인력 확충, 예산 증액과 함께 해양쓰레기 수거·운반체계 구축을 위한 청정해역 환경정화선 건조, 해양쓰레기 전용 집하장 설치·처리비 지원 등을 건의했다.

전북도, 2020 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에 국비 52억 확보

교통정책과, 2019.10.17.

도시
정책

안전

진행

전북도는 행안부가 주관하는 '2020년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사업'에 전년보다 15억 원이 증액된 국비 52억 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행안부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은 지방도 교통안전 및 취약계층 지역에 대한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회전교차로 설치,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개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등 5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세부사업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22개소, 회전교차로 11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23개소, 노인 보호구역 2개소,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2개소 등 주요 61개 지점의 교통환경을 개선함으로 도내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 생활SOC복합화 사업위해 국비 465억원 확보

예산담당관, 2019.10.03.

건축
정책

진행

전라남도는 생활SOC복합화 사업으로 해남군 땅끝가족어울림센터 건립, 광양시 광영 생활형 SOC복합시설 등 3건, 화순군 세대 연대 센터 건립 등 18개 사업에 국비 465억 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시군별로 해남군의 경우 7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1위 달성과 다문화 가족 자녀 증가에 따라 '땅끝가족어울림센터'를 건립한다. 화순군의 '세대 연대센터'는 국민체육센터, 가족센터, 주거지주차장,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등 5개의 지원사업과 군 자체사업인 주민자치센터, 엄마의 학교, 마을혁신센터 등 총 8개 시설을 갖추게 된다. 순천시의 '오천지구 복합플랫폼 구축'은 우수지를 활용해 국민체육센터와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생활 인프라 개선사업이다. 광양시의 '광영 생활형 SOC복합시설'은 공공도서관, 다함께 돌봄센터, 주거지 주차장을 포함하는 복합 플랫폼을 갖추게 된다.

전남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국비 12억 확보

안전정책과, 2019.10.14.



전라남도는 행정안전부의 ‘2020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공모사업’에 목포시와 광양시가 선정돼 국비 12억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목포시 근대문화사길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사업비 22억 원을 들여 1897 개항 문화거리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해 추진한다. 근대문화사길 7개 구간 2.1km에 보도 설치, 일방통행체계 도입, 굴절차선 표시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다.

광양시 먹거리타운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사업비 4억 원을 들여 추진한다. 보행자 도로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먹거리타운을 보행자와 차량 친화적 도막형 컬러포장,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경관 조명등 및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이다.

전남도, 2020년 해양환경 정화사업 확대 운영

해운항만과, 2019.10.23.



전라남도가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신규사업을 추가 발굴하는 등 2020년 해양환경 정화사업 예산을 512억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2020년 신규 사업으로 득량만 청정어장 재생사업(3개 시군), 해양환경 정화선 신규 건조 3척, 권역별 해양쓰레기 전(前)처리시설 2개소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쓰레기는 조류나 계절풍에 의해 국가 간, 지역 간 이동하고 수거하는 해양쓰레기의 90%를 지자체에서 처리하는 만큼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등 수거처리예산 국고 보조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고, 재원도 균특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변경해줄 것을 정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다.

경북도, 경북바이오2차 일반산업단지 착공

도시계획과, 2019.10.10.



경상북도와 안동시는 10일 안동시 풍산읍 매곡리 일원 경북바이오2차 일반산업단지 예정부지에서 경북바이오2차 일반산업단지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조성공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에 착공되는 경북바이오2차 일반산업단지는 안동시 풍산읍 매곡리 일원에 총 사업면적이 53만㎡이며 빠른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을 위하여 우선 1단계 30만㎡에 대해 먼저 기공식을 갖고 내년부터 2단계 23만㎡를 순차적으로 개발하여 2022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기 조성된 경북바이오 일반산업단지와 연계한 산업단지로서 주요유치 업종은 바이오산업, 음식료품, 비금속광물, 기타제조업 등이다. 폐수 종말처리시설,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조성원가를 낮추어 분양경쟁력을 크게 높였으며, 앞으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 「생활SOC복합화 사업」 23개소 선정

예산담당관, 2019.10.04.



경상남도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공모한 생활SOC복합화 사업에 총 23개소 53개 시설이 선정되어 국비 600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경상남도의 복합화 사업 23개소에는 개소별 2~6개의 생활SOC시설이 들어선다. 시설별로는 공공(작은)도서관 12개, 국민체육센터 8개, 생활문화센터 15개, 가족센터 4개 시설 등 총 53개 시설이 들어서며 주민들의 생활인프라 개선이 기대된다.

세종시, 생활SOC 복합화 사업 2곳 선정

해외건설정책과, 도시정책과, 2019.10.07.

건축
정책

진행

세종시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생활SOC 복합화 공모사업에 전의면·전동면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2건이 선정되어 3년간 국비 43억원을 지원받는다.

이번에 선정된 전의면 복검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유아시설 등을 복합화하여 건립하는 사업으로, 문화·체육·복지시설과 농업·교통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다양한 주민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함께 선정된 전동면 복검도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면사무소, 보건지소, 복지회관 등을 통합적으로 건립하여 행정서비스와 함께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및 맞춤형 문화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건축·도시분야 시스템구축 동향



서울시, 도시농업 정보 제공해주는 「서울농부포털」 오픈

도시농업과, 2019.10.14.



서울시가 도시농업인구 증가에 발맞춰 도시농업의 모든 정보를 망라해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서울농부포털’을 구축했다. PC는 물론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을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텃밭 분양부터 농작물 키우기 온라인 강좌, 박람회 정보, 서울시가 추진 중인 도시농업 정책 등 서울도시농업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다. 도시농업 관련 교육의 경우 포털을 통해 신청도 할 수 있다. 특히 시는 ‘서울농부회원제’를 도입해 회원에겐 글쓰기 권한, 맞춤형 뉴스레터·문자 알림서비스, 교육신청 기회 등 비회원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산시, 지하도 상가 7곳 무료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실시

스마트시티추진과, 2019.10.27.



부산시는 부산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지하도 상가 7곳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해 2개월간의 시범 운영을 마치고, 10월 28일부터 무료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본격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이는 「프리 와이파이 부산」의 일환으로 실시한 부산정보고속도로 고도화 민간투자사업(BTL)의 추가사업으로 지하도 상가 7곳에 62대의 와이파이를 추가로 구축한 것이다.

시는 지난 9월부터 모든 시내버스에도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하도 상가는 특정 통신사업자의 단말기에만 무선인터넷이 제공되었으나, 이번에 설치한 와이파이는 상가 이용자, 국내·외 관광객 등 누구나 무선 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 이용자 편의를 높였다.

건축·도시 정책정보센터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는 국내 건축도시 분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기록자료와 정책정보 및 학술연구정보 구축을 통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 정책수립과 사업추진을 위한 지적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2007년 「건축기본법」발효 이후 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과 관련한 각종 기록자료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학술문헌 및 연구정보 구축을 통해 건축·도시 분야의 관련 정보와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01호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architecture and urban policy information center,
701, 194, Jeoljaero-ro, Sejong-si, 30103, Korea



9 772635 514009
ISSN 2635-5140